

한·미 FTA청문회 이틀째 공방

與 “李 대통령 사과 담화 발표하라”

FTA - 쇠고기 재협상 동시 처리 주장도

野 “광우병 위험물질 ‘안전물질’로 둔갑”

여야는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이틀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한 재협상 여부와 책임론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또 일부 의원들은 수입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재협상·책임론 공방=이날 청문회에서는 15일로 예정된 농수산물부 장관의 고시 연기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청문회 초반부에 고시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협상과 책임론으로 공방의 초점이 옮겨졌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미 축산협회 홈페이지에는 2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미 정부와 불화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한국 정부는 월령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결국 협상 통보를 받기 전에 우리 정부가 졸속으로 입장을

을 정리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최 성 의원은 “경주 황돌기, 홍추 극돌기 등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데 이번 협상에서 안전물질로 둔갑해 수입도록 했다”고 추궁하자 정운천 농수산물부 장관은 “위험물질을 수입기로 한 것은 없다. 국제적·과학적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고시를 열을 가랑 연기하겠다는 것은 결국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한 다음에 촛불집회가 사그라지면 밀어붙이겠다는 뜻 아니냐”며 “재협상과 고시 수정 없는 유예는 국민 기망”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해봉 의원은 “농식품부는 사전에 미국 관보를 몰랐고 오역했을 뿐만 아니라 GATT 20조도 외교부가 조언해 알았다고 했다”며 “주무부처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죄를 하고 책임질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정 장



정운천(왼쪽)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14일 국회 통일외통위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은 장관 고시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FTA 비준과 쇠고기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면 이제는 정치적 해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담화 발표와 FTA 비준안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의 동시 처리, 여야 영수회담 등을 제안했다.

▷수입 개방 대책 촉구=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국내 보안대책에 대한 비용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한미

FTA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규모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알 수 없다”면서 “향후 정부는 정보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제공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지난 1995년 EU(유럽연합)가 위생문제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뒤 무역 회복을 향한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광우병 쇠고기가 발견돼 수입금지 조

치를 할 경우 다른 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전락물자의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이끌어 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면서도, 지난 14년간 삼계탕조차 미국에 제대로 수출을 못 하고 있다”고 협상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에서 폐지까지

2003. 04. 0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초대 위원장에 성경룡)
2003. 12. 2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 제7061호)
2004. 05. 06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구성
2005. 01. 01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시행
2005. 12. 26	혁신도시 10곳 입지 선정 발표
2006. 12. 22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2007. 09. 12	혁신도시 사업 첫 착공(제주 서귀포)
2008. 02. 20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협상에서 존치결정
2008. 05	근거법령 전면개정 및 명칭변경 결정

■ 균발위 폐지 일파만파

지방 낙후 탈피 법적장치 사라져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실질적인 폐지에 나서면서 기업·혁신도시로 대변되던 참여정부의 지방 정책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개발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낙후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균발위가 폐지되고 별도 기구로 운영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그 토대 위에 광역경제권 계획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책의 변화=균발위의 조직 축소, 명칭 변경, 특별법 개정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에 맞춰져 왔던 지방정책의 초점이 이명박(MB) 정부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 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산벨트(Sun Belt) 구상'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의 지방 정책이 지방의 나뉠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방 스스로 자생력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방 정책 방향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지역별 사정이 달

라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균발위 사업 변화=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4월24일)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혁신발전계획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지던 사업들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만 향후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타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높은 광주·전남은 그동안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나름대로 실리를 챙겨왔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배려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의 미래 청사진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계획도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행대로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발위가 폐지되고 별도 기구로 운영되더라도 기업·혁신도시 계획을 유지하면서 5+2광역경제권이나 산벨트광역경제권 등 광역경제권 구상 등을 추가 보완하는 형태의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뢰 회복 겨냥 악화된 여론 달래기?

■ 정부, 장관고시 왜 연기했나

정부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법적 발효절차인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들이 300건이 넘는 만큼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시연기를 기술적인 차원으로 한정시키고 있지만 쇠고기 중국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장관고시의 연기 여부에 대해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점은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고시를 연기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예상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벌이기 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괴담’이 돌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됐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묘하게 겹친 기술 협의 타결 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끝장 토론’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무해성과 협상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아직 관련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시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이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협상이나 협의의 문구 수정은 현실 여건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자 간 협상 특성상 이미 합의된 국제 협의에 대해 여론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효력 발생을 늦추기는 힘든 탓이다. 특히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인 국내 사정을 잘 알아 성명서 발표 등 지원사격까지 했던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의 쇠고기 위생조건 발표 시기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쇠고기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연결돼 ‘재협상은 곧 한미 FTA 발효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에 필요한 시간까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 장관 고시에 美 성명 반영 검토”

김종훈 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을 (농림수산물부 장관) 고시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출석, “국제수역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변동시킬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한 협정문 5조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연합뉴스

광주로 이어지는
KB *b 부동산신탁의 성공 서비스!

한결 같은 믿음으로 KB부동산신탁주에 매몰하여 추진
고객님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신탁의 신뢰성과 공신력으로 끝없는 성장을 거듭해온
KB부동산신탁주에 그 평성 그대로 빛고를 광주에 지름을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www.kbint.co.kr